

남북연락사무소 가동중단 한 달...코로나 19 확산에 '정상화' 요원

송고시간 2020-02-27 07:50



홍유담 기자

서울-평양 전화선으로 '연락업무' 유지...현안 논의 당분간 어려울 듯
주요 대북협력사업 계획 발표도 잇따라 연기



한산한 통일대교

남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해소 때까지 개성연락사무소를 잠정중단하기로 한 지난 1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 출근하려던 남측 인력의 출입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잠정폐쇄 조치가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조기 재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주춤해지면 북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남측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이제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달 30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예정에 없던 연락대표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성에 상주하던 남측 인력 58명이 같은 날 모두 남쪽으로 복귀했다.

연락사무소 잠정폐쇄는 남한 내 확진자 증가 상황을 우려한 북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남한 내 확진자는 모두 6명이었다.

여전히 '코로나19 청정국'을 자처하는 북한은 남한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연일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남측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연락사무소 정상화를 포함해 남북 간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가동중단에도 남북 간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 당국은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 선을 개설해 남북 연락사무소의 연락업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업무는 전화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일 두차례 시험통화 하는 수준이다. 남북 간 현안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남북 대화 단절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정부 안에서는 남북관계의 상징적 장소인 연락사무소의 폐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남북 경색국면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전화선과 팩스 선을 통해서도 의사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당국 간 협의의 효율성이나 긴밀성 등을 따져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서울-평양 간 전화선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등을 희망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의 대북 서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 가동중단 상황이 해를 넘기게 될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무소 내 주요시설은 현재 북측 인력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경색 국면에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각종 남북 협력사업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도 전에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구체적인 관광 유형까지 공개했던 대북 개별관광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의 주요 대북협력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는 이미 3~4월 이후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남북협력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4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7 07:5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뉴스핌 기사 프린트

[하노이 노딜 1년] ① 지난해 13차례 도발한 北, 올해는 왜 조용한가

김정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서 "새 전략무기 공개" 엄포
전문가 "코로나19에 도발 연기...진정되면 美 대선 전 도발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6:01
-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7:43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당시 하노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각자가 주장하던 '빅딜(일괄타결식 비핵화)'과 '스몰딜(단계적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No Deal)'이다.

이후 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쓴맛'을 보여주려는 듯 지난 한 해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급기야 북한은 지난해 말 '새 전략무기' 공개까지 시사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

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됐다"며 "이제 세상은 곧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예상 외로, 북한은 올해 들어 한 번도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의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 전문가 "北, 코로나19가 최우선 문제... 지금은 도발할 여력 없어"
"코로나19 진정되면 인공위성·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할 것"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북한 건군절이나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이 새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발표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전염병까지 돌면 주민들이 엄청 동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그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코로나19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북한은 언제쯤 도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따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은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것을 추진할 만한 국가적 여력과 역량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은 미국 대선 전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미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새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샌더스 상원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하는 등 북한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민주당에서 샌더스 의원이 당선이 되든 북한에게는 크게 나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금지선(레드라인)은 안 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해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북한의 대외정책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사전에 길들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도발을 하고, 대선 이후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인공위성 발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에서 존재가치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대진 교수도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재설치 등 저강도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레일 관광열차 운행 잠정 중단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조치”



한국철도(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여행객이 많은 관광열차 운영을 26일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상 열차는 중부내륙순환열차(O-트레인),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 남도해양열차(S-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A-트레인), 서해금빛열차(G-트레인), DMZ평화열차(DMZ-트레인) 등 전국 5대벨트 관광열차와 바다열차, 경북관광테마열차, 해랑 등이다.

코레일 측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열차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권 기간 연장, 위약금 감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열차 출발 전 승차권을 변경,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병원 치료, 자가격리, 개학 연기 등으로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국 역 창구에서 정기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 운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고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